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고찰* **

-재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를 중심으로-

박형준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문제 제기: 다문화 연구의 임계와 새로운 시차
2. 재현의 윤리와 ‘당사자’라는 프리즘: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
3.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 재한 화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3.1. 두 가지 연구 방법과 사례
 - 3.2. 손덕준 구술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의 대상화 비판과 자기 대표성
 - 3.3. 우매령 수필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 권리언어의 회복과 자기 결정권
4. 결론을 대신하여: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의의와 과제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논문은 2020년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1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당사자주의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한 글이다.

<Abstract>

Park, hyung-jun. 2021. 10. 20.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multicultural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concerned.**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9, 49-73. Efforts to understand the problems faced by multicultural par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ways. However, the lives of multicultural parties have always been objects of sympathy or favor. Based on th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The point of view of the parties',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core values of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es involved. First,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is a paradigm of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to faithfully reflect the position and rights of minorities. Second, the core of the parties' perspective is self-representat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can provide a new direction for multicultural discourse and policies centered on intellectuals, activists, and bureaucrats. Third,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es does not exclude researchers, activists, and policy makers, but rather seeks solidarity and exchange. Next, the direction and cases of multicultural research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es could be found in qualitative research and literature research. First, when using the existing field research method in multicultural party research, care must be taken not to target the subject. Second, as seen in the life and history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Korean society is a situation and environment in which it is difficult for multicultural parties to voice their voices. Third, minorities living in Korean society are deprived of self-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rights. Fourth, there are voices of resistance to

restore the minority's self-representation and decision-making powe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The point of view of the parties, Multicultural Studies, Chinese Diaspora, Self-representation, Self-determination

1. 문제 제기: 다문화 연구의 임계와 새로운 시차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가파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지역, 인종, 언어, 정치, 경제,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시민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권오경, 2010: 43).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박윤경·박선운, 2021: 53~54), 그 성격과 학문 영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국가적인 다문화 현상의 원인, 과정, 배경, 변천 양상, 인식, 태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이다. 주로 철학, 사회학, 역사학, 고고학 분야에서 이러한 내용을 고찰해 왔다(데이비트 바트럼 외, 2017: 4~7). 둘째, 한국의 다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보다 수평적인 소통 방법과 사회 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연구이다. 대체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최기탁, 2016: 665; 류지현·김현주, 2021). 이러한 연구 성과는 단순히 학술적 결과의 집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건강한 국가 공동체 구성과 지속을 위한 이론/실천적 과제라는 것을 방증한다.

다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강진구·

이기성, 2018), 훌륭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학계와 현장에서 소수적인 목소리를 재현하고 지원하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부분 역시 없지 않다. 다문화 연구와 정책 개발 과정에서 ‘다문화 당사자’¹⁾의 삶과 경험이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교,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의 삶은 언제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되어왔다(이용재, 2019: 21).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지식인이나 예술가, 혹은 활동가에 의해 ‘재현되어야만 하는 객체’로 타자화되고 대상화되어 온 것이다. 관련 연구 통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다문화 ‘당사자의 관점’²⁾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사자주의 혹은 당사자 연구는 주로 법학, 장애학, 사회복지학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다. 일부 영역에서 다문화를 주제로 한 당사자 연구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이선희·김은재, 2012: 321; 김은재·최현미, 2016),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했다.³⁾ 다문화 현상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연구

-
- 1) 다문화 환경에 놓인 당사자는 지역, 인종, 민족, 세대, 젠더 등에 따라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 논고에서는 국제이주의 경험이나 재생산 역사가 존재하는 ‘다문화 당사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로 한다.
 - 2) 무카이야치 노리아키(2016: 130)에 따르면, 당사자의 시각에 입각한 사회문화 연구는 ‘당사자주의’, ‘당사자 연구’, ‘자조(모임) 연구’ 등의 용어로 명명되어 왔다. 여기서는 특정한 이념과 방법에 국한된 논의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직 다문화 분야에서 당사자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을 문화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조 모임의 취지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모임이 아닌 구성원 간의 문체해결”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조기 정착 지원”에 머물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28).

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과는 상반되는 일이다. 이제, 한국 사회도 다문화 담론과 정책 공간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요구가 정당하게 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당사자의 권리언어를 직조하는 새로운 시차(視差)와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다문화 이론과 교육 현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당사자 관점’의 핵심 가치와 연구 필요성을 고찰하고,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발화하고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방향과 가능성을 재한 화교의 구술/수필 텍스트 분석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⁴⁾

2. 재현의 윤리와 ‘당사자’ 라는 프리즘: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

전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이주의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내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⁵⁾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문화 다양성 가치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학계, 정부, 유관기관, 시민 커뮤니티 등에

4) 이 논고에서 ‘재한 화교’를 분석 사례로 삼은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화교는 1884년 개항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 거주한 다문화 당사자이며, 둘째, 한국전쟁을 거치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겪어 왔으며, 셋째, 현재에도 구화교와 신화교의 복잡한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다문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은정태 외 3인, 2007: 4).

5) 2021년 교육 기본통계 조사를 참조하면, 팬데믹 이후에도 다문화 가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다문화 배경 학생 수는 160,056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연합뉴스 기사(「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 최대 규모 실태 조사」, 2021.8.21)를 참조할 것.

서 이뤄지고 있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동화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세계시민주의, 상호문화주의 등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소수 문화와 다수 문화의 차이를 표백하지 않고, 상호 존중과 수용에 이르고자 하는 ‘상호문화주의’ 혹은 ‘상호문화이해’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이념과 방법을 제공해주기도 했다(김영순 외, 2014: 40~41). 그러나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당사자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상호문화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층적, 정책적 차원에서 두 가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 당사자를 대부분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층구조에 위치시킨다는 점이다.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배려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 주도적 담론 생산과 정책 고안 방식이 다문화 당사자의 존재와 목소리를 언제나 사회적 커뮤니티의 바깥에 배치한다는 사실이다(이용재, 2019: 21~24).⁶⁾ 둘째, 다문화 당사자를 사회적 갈등 해결과 이해관계 조정 국면에서 언제나 수동적, 보조적, 부분적인 존재로 격하시킨다는 점이다.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의 선의와 무관하게, 당사자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계층적 구별짓기를 통해 타자화된다.

이것이 당사자의 관점을 고려한 다문화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연구자와 활동가의 사적 도덕률과 가치 중립적 태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다문화 당사자의 삶과 문화를 연구자(혹은 활동가)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재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즉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가 닿는다. 사회과학 분

6) 이용재(2019: 21)는 다문화 당사자를 “사회기층에 위치” 시키고, 또 “시혜적 정책”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은 결국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정부 주도”적 다문화 담론과 정책의 효과라고 보았다.

야에서 소수자를 계층적으로 주변화하고 수동적 대상으로 종속화하는 지배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재현의 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창작자나 비평가의 예술적 재현만이 아니라, 지식인의 학술(조사, 보고, 논문)적 재현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가 사이드와 스피박은 이러한 관점에 주목한 바 있다.

전자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지식에 의해 대상화되는 것은 본래 조사에 약하다”(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 2004: 70)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식인과 연구자에 의해 대상화되는 피조사자는 권력의 위계구조 상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며, 그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발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⁷⁾ 후자의 경우, ‘서발턴’⁸⁾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소수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서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현의 윤리에 관한 스피박의 논고는 지식인이 “투명”하게 연구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유하게 한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옮김, 2013: 74). 이는 다문화 연구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데, 그 이유는 서발턴 개념이 정체성 정치, 토착주의, 막무가내 다문화주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⁹⁾

-
- 7) 주지하다시피,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서양을 ‘우월/합리/정상’으로, 동양을 ‘열등/비합리/비정상’로 (재)구성하는 지식과 권력의 역학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이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상징조작의 과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 8) 하위주체로 번역되곤 하는 서발턴(subaltern)은 “기존의 정치적 지배 단어들 대신, 영향력 있는 정치 담론들로 미리 정의되지 않은 종속적 처지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피식민지 여성, 노동자 등이 겪는 이중의 억압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재현하기 어려운 곤경을 표현하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스티븐 모튼, 이윤경 옮김, 2005: 91).
 - 9) 스피박은 ‘주체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에 천착해 왔다.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는 1983년에 일리노이 대학의 어베너-샘페인 캠퍼스에서 「권력과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후 여러 차례 수정을

지식인 혹은 연구자에 의해 자기의 삶이 설계되고 서술될 수밖에 없는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재현 문제는 결국 다문화 현장 연구에서도 중핵 의제가 된다. 그러나 개개인이 처해 있는 문화적 갈등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당사자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초하기 위한 시도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다문화 연구에서 ‘당사자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문화 연구는 당사자주의, 당사자 연구, 자조 연구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통상 법률적 용어(當事者主義, consumerism)로 사용되어 왔다. 인문학, 사회학, 문화학 영역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장애학 분야에서 인권 운동의 실천적 이념이자 현장 이해의 새로운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법학 분야를 제외하고 나면, 기존의 당사자주의 혹은 당사자 연구는 대체로 사회복지, 장애, 특수교육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흐름과 특징을 먼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유동철에 따르면(2003: 277~278),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역사적 뿌리는 미국의 자립생활 운동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기초해 있다.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장애인의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을 핵심적인 것으로

거쳐 완성되었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옮김, 2013: 151).

- 10) 당사자주의는 법학, 국제사법, 형사법과 정책, 행정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 사회복지, 장애학, 혹은 특수교육 분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교육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도 유사한 내용과 방법을 적용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간주하는 이념”이 특징이다. 김도현(2016: 149)은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즉 DPI의 출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1981년 제1회 싱가포르 세계대회에서 그 주창이 정식화되었다고 보았다. DPI는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대변해야 한다는 자기 대표성(self-representation)의 원칙”을 가장 강조한다.

유의할 점은,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때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규정과 구분이 쉽지 않고, 종종 정치적 목적에 의해 당사자주의와 집단이기주의가 착종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사자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자조적 커뮤니티와 선형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김대성은 “당사자주의의 목적은 참여에 있다”(2003: 180)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나 당사자가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적 공론장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입장과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고 연대하면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당사자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당사자주의 연구를 참조하여, 다문화 연구에 필요한 ‘당사자 관점’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소수자의 입장과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참여’와 ‘저항’의 패러다임이다. 물론, 당사자주의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와 행위가 당사자 분파주의로 고착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당사자의 갈등 해결 과정을 집단이기주의로 환원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김도현, 2019: 283). 둘째,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원리와 목표인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은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에서도 핵심이 된다.¹¹⁾ 주류 사회의 혐오와 배제에 의

11) 김대성은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2003: 179~180). 먼저, “자기 대표성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스스로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대표성은 자신(당사자)의 이해와 요

해 참여와 결정의 기회/권리를 박탈당한 다문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현(self-representation)하고, 각자에게 부여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결정(self-determination)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지식인, 활동가, 관료 중심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셋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의 배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연대와 교류를 지향한다. ‘자기 대표성’이라는 당사자주의의 원리가 부모, 교사, 활동가, 사례관리자, 연구자 등을 배척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도현(2012: 180~181)의 정확한 지적처럼, ‘자기 결정권’은 당사자주의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다문화 당사자가 처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류와 연대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혹은 문화 다양성 연구에서도 ‘당사자의 관점’이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3.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 제한 화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3.1. 두 가지 연구 방법과 사례

구가 몇몇 학자와 행정전문가, 노동전문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당사자가 그 문제에 관한 한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자기 결정권은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에 관한 한 그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 시기, 그 결과에 따른 책임까지 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만이 가장 올바르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당사자주의 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가치와 시사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다문화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설계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입장에 주목한 다문화 연구는 ‘당사자주의’라는 이념적(ism) 용어가 아니라 당사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실천적 연구를 지향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다문화 당사자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주체적 참여와 협력적 연대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입장과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다문화 연구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문화 현장의 실태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사 방법으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양적/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분되는 현장(실행) 연구 방법이다(성태제, 2002: 35~36). 최근의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김재훈·김민선, 2021: 13),¹²⁾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등에 입각한 양적 연구가 인터뷰와 사례 조사에 근거한 질적 연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현상과 실태를 계량적 자료(quantitative datas)에 근거하여 수치화하고 유형화하는 조사, 실험 연구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양적 접근 방식은 다문화 연구의 대상이 되는 피조사자의 일상 경험과 가치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양적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 현장에서도 현지 조사(field work)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첫째, 대부분의 질적 연구가 참여자와

12) 다문화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 논문 중에서 23.4%가 질적 연구, 75.3%가 양적 연구, 1.2%가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박윤경·박선운, 2021: 12~14).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하여 수행하는 삼각기법(triangulation)도 있으나, 다문화 연구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의 면담과 경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박윤경·박선운, 2021: 53~54). 다문화 당사자의 인식과 행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의 생활을 긴 시간 관찰하고 몰입해서 기술하는 참여 관찰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시간, 공간, 비용의 제약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연구자의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질적 연구에 참여하는 다문화 당사자의 동의 여부, 인권 보호, 라포 형성, 권력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조대훈, 2014: 38), 연구의 목적과 기간, 연구자의 문화 다양성 패러다임, 의미화 작업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적 연구이든, 질적 연구이든, 당사자의 입장이 결여된 다문화 연구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첫째, 다문화 당사자는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무능력한 하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대표하고 자기 삶의 결정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둘째, 문화 다양성 주체의 삶을 언제나 연구자, 활동가, 작가, 예술가, 비평가 등이 대신하여 재현하는 것은, 당사자의 삶을 왜곡하고 비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¹³⁾ 물론 이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문화 연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학 분야의 당사자 연구 사례를 참조해 보면, “동료지원 활동가”와 “연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13) 본론 2장에서 언급한 ‘재현의 윤리’란 이러한 한계를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 철학적 의제이다.

14) 장애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당사자 연구에서 ‘동료지원 활동가’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의 책임 저자인 케린 테일러는 영국 정신건강 당사자와 그 가족의 회복(Recovery)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동료지원 활동가이자 전문가이다. 그녀는 당사자의 “보호”가 아니라 “옹

당사자 연구, 혹은 자조(스스로를 돕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경험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다.¹⁵⁾ 기존의 다문화 연구에서도 당사자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이다(김은재·최현미, 2016: 146). 두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기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구술 인터뷰’와 ‘당사자 수기’를 제시할 수 있다. 구술 인터뷰는 다문화 당사자의 생각과 경험을 미시 생활사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질적 텍스트가 된다. 다음으로, 당사자 수기(手記)는 자기 자신의 체험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한 문헌 텍스트이다. 이는 조사자의 연구 목적에 의해 당사자의 발언 의도가 왜곡되거나 과잉 해석될 여지가 적다.¹⁶⁾

호”를 중요한 건강 회복의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중심이 되거나 당사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력을 통해 비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케런 테일러 외, 제철웅 옮김, 2018: i~iii).

15) 장애인 당사자 연구의 실천적 모델로 널리 알려진 곳은 일본 홋카이도 우리카와에 있는 ‘베델의 집’이다. 한국에서도 베델의 집의 실천적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과가 『베델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2016),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당사자 연구』(2021) 등의 성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연구 사례를 보면, 당사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언어(“말”)의 회복과 복원이다(무카이야치 이쿠요시, 2016: pp.122~127; 유쾌한 고생연구소, 2021: 19).

16) 전자와 관련한 연구로 김중규(2007), 「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 과정-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호, 역사문화학회, 111~150쪽 등이 있으며, 후자와 관련된 연구로 이성림·차희정(2013), 「한국 내 결혼이주 여성의 다문화 체험과 정체성 구성 -결혼이주 여성 수기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8호, 한중인문학회, 163~186쪽; 박선옥(2011), 「여성결혼이민자 수기(手記)에 나타난 문화 변용 양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1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

이 논고는 시론적인 성격의 글인 만큼 세부적인 연구 설계 매뉴얼이 아니라, 재한 화교를 중심으로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사례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대상 텍스트는 재한 화교(華僑)의 구술 인터뷰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손덕준 구술, 송승석 채록)과 수필 『아버지와 탕후루』(우매령)이다.¹⁷⁾ 두 텍스트는 재한 화교의 삶과 어려움을 당사자의 언어로 재현하고 있다.

3.2. 손덕준 구술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의 대상화 비판과 자기 대표성

재한 화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방법과 자료 중에서, 먼저 구술 텍스트를 살펴보자. 당사자 관점에 근거한 문화 연구는 아니지만, 이미 질적 연구의 한 방법으로 재한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을 구술/기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비록 많은 자료가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화교 당사자의 목소리를 채록하고 기록한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인천, 군산 지역 등에 거주하는 13명의 화교를 인터뷰한 『한국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국사편찬위원회, 2007)과 부산 지역 화교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록한 『내 안의 타자(他者), 부산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2009, 부산발전연구원) 등을 들 수 있다.

구술사 자료는 연구자에게 다문화 현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간접적 텍스트가 되며, 다문화 당사자에게는 자기 삶을

원, 107~139쪽 등이 있다.

17) 두 텍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손덕준의 구술 인터뷰와 우매령의 수필은 인천과 수원, 각기 다른 생활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둘째, 동일한 화교 디아스포라 텍스트임에도 손덕준의 인터뷰는 질적 연구 자료로, 우매령의 수필은 문헌 연구 자료로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표현하고 기록하는 ‘자기 반영적 산물’ 이 된다.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한 방안으로 인터뷰를 비롯한 질적 연구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인터뷰, 면담, 관찰만이 아니라, 다음 절에서 다룰 수기 역시 당사자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거나 다시 쓰여진 ‘당사자 텍스트’ 가 된다.

여기에서 분석 사례로 제시한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은 인천대학교 HK중국관행연구사업단 송승석 연구교수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재한 화교 손덕준과 그의 가족이 면담에 참여했다. 화교 2세 손덕준은 1956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 본인과 가족이 겪은 생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 소수자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손덕준과 그 가족의 구술 자료를 통해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사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화교라는 대상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현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인천부터 시작해 전국의 화교 거주지를 찾아다녔다. 특히, 일주일에 거의 반을 인천 차이나타운을 기웃거리는 것으로 소일했다. 그때마다 화교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필요에 따라 찾아와서 그 필요성이 충족되면 발길을 끊는 많은 화교연구자들의 일회성 방문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그래 가지고는 화교를 몰라” 라는 따가운 충고였다.¹⁸⁾

② ○ 그럼, 동향회관은 전쟁 때 폭탄 맞고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 지금도 거기에 흔적이 조금 남아 있어. 거기에 우리도 집 짓고 살았어. 그 절 뒤쪽에 큰 산 있어. 영국산(英國山)이라고. 나중에 올림포스호텔 지으면서 집값도 받지 못하고 우리 쫓겨났어. / ○ 보상도 못 받고? 한 푼도 못 받았어. 돈을 안 줬어. 아버지도 어디에서 돈을 받는 건지도 몰랐고(46). (...중략...) ○ 왜 한국에 오셨대요? / 공산당, 공산당 있잖아(55).

18) 손덕준 구술, 송승석 채록(2012),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인천화교 손덕준의 가족이야기』, 한국학술정보, 9~10쪽. 3.2절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첫째, 다문화 당사자의 역사, 생활,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구술사(질적 연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필요”와 “일회”적 목적에 의해 피조사자를 대상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용문 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화교 당사자에 대한 연구 대상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조사자를 연구 대상으로만 삼는 행위는 다문화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을 박탈하고 객체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손덕준의 구술 작업을 진행한 송승석 교수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잣대로 구술 사료를 함부로 보정하지 않고 ‘기록’ 자체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뷰어는 인터뷰이의 “주관적” 기억이 “개입”된 부분까지도 그대로 가족사의 한 장면으로 레코딩하고 있으며, 또 인위적인 첨삭을 가하지 않고 있다.

둘째, 화교 당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발화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인용한 ②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손덕준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화교 1세대는 “공산당”을 피해 한국으로 왔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오히려 이념적 적대자이자 이방인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해 왔다.¹⁹⁾ 제한 화교 역시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의 당사자이자 공동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²⁰⁾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제도로 인해 심적·물적 피해를 받아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없었다. 화교들이 자녀 교육을 통해 이러한

19) 이 점은 우매령의 수필에서도 확인이 된다. “당시 중국이라 하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공산당이라 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나쁘고 사악하며, 우리 선조들은 그런 공산당을 피해 한국에 정착한 것이라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다(우매령, 2016: 192).”

20)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이전에는 상당히 연세도 있고 잘나갔죠. (...중략...) 근데 6·25 지나고나서부터 고생 시작이지, 뭐. 이게 사실 전쟁 때문에 집안이 다 으스러진 거죠(25~26).”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거나, 화교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²¹⁾

손덕준에 대한 인터뷰 역시 학술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조사자는 인터뷰와 자료 생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자의 성찰적 자세를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 근거는 연구자가 당사자의 언어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영웅담과 냇두리” 까지도 세심하게 기록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진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재한 화교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 정리를 통해 다문화 당사자에 관한 “연구 시야”를 “확충”하고, “역사서술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 중 하나가 된다.

3.3. 우매령 수필 텍스트의 경우: 당사자 권리언어의 회복과 자기 결정권

구술사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는 다문화 당사자의 역사와 경험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즉 ‘자기 대표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력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기 반영적 글쓰기에 기반한 문헌 텍스트 역시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사례가 된다.²²⁾ 다양한 글쓰기 장르가 활용될 수 있지만, 자기

21) 손덕준은 인천 차이나타운연합회 초대회장, 인천 화교협회 부회장, 인천 중구청 중국투자유치자문위원회 자문대사 등으로 활동했다.

22) 문헌 연구의 토대가 되는 다문화 당사자의 기록 혹은 글쓰기 사례를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국제 입양 당사자 25명이 쓴 글을 묶은 책이다. “당사자들로서 자신의 삶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기존”의 입양 “담론을 비판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입양 권력의 해체”를 도모하고 있다. 당사자 텍스트의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뿌리의 집 옮김, 2012: 9~10).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 당사자의 언어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갈래는 ‘수기’이다. 여기서는 수원 출신의 화교 2세 우매령 작가가 쓴 수필 『아버지와 탕후루』를 문헌 연구 텍스트로 삼도록 한다.²³⁾

수기 중에서도, 수필은 사적인 기록이다. 실제로 우매령의 글은 유년 시절, 성장 배경, 학창 시절과 직장 생활, 혼종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차별과 편견,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까지 폭넓은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작가 개인의 추억과 낭만적인 소회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화교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²⁴⁾ 수필이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문화 당사자의 삶과 목소리를 재현하는 연구 텍스트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수기의 장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내부 이방인(outsider within)’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묘사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치를 사유하는 문학·문화 콘텐츠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또 의미 있는 사회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이주 및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논의는 학술 영역에 그치지 않고, 문학, 영화, 연극, 웹툰, 드라마 등을 비롯한 ‘문화적 재현 영역’에서도 약진하고 있다(배상준, 2015: 83~82).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다문화 이론과 현장, 그리고 재현 연구에서 연구자, 활동가, 예술가, 비평가들이 충실하게 소수적인 목소리를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강진구·이기성, 2018).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다문화 당사자의 입장과 권리를 옹호하는 언어(권리언어)를 고안하

23) 우매령(2016), 『아버지와 탕후루』, 범우. 3.3절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24) 우매령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글쓰기와 연결시켜 사유해 왔으며, 그러한 고민과 경험은 고스란히 수필에 반영되어 있다. 다문화 당사자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사례라 할 수 있다.

는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다문화 당사자의 수필 텍스트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자기 반영적 글쓰기’의 산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매령의 『아버지와 탕후루』는 이러한 문제 인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③ 학창 시절,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언제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왜 한국 국적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는 것과, 왜 하필 중화민국 국적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늘상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답을 준비해 놓았다. 대한민국에는 이민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적은 중국 본토일지라도 이데올로기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냉전체제 하의 한국 정부에선 6·25사변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인들에게 ‘중화민국’ 국적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이다 (116).

④ 6월의 어느 날, 서울 주재 대만대표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한 화교 500여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들었다. (…중략…) 그들은 “대만 내 국민과 동등한 여권제도를 적용해 달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중략…) 원적은 중국 본토이지만 국적은 중화민국 대만성이고 삶의 터전은 한국이라, 그들의 인생만큼이나 복잡한 제도에 묶여 살아온 셈이다. 이 또한 대만 내 국민과의 엄연한 차별이며, 재한 화교들의 여권은 그 어느 곳에도 쓸모가 없는 속이 텅텅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32).

첫째, 화교 2세 우매령의 수필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 박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의 인용 자료에서 보듯, 한중수교 이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구화교는 대만, 중국, 한국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이 혼종되어 있다. 원적은 중국 본토이지만, 국적은 중화민국 대만성이고, 또 살아가는 곳은 한국이다. 그러므로 재한 화교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정치적 맥락이 요구된다. 화교의 국적 문제는 이러한 조건과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제도는 그러한 정체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²⁵⁾

둘째, 우매령의 수필 텍스트는 다문화 당사자의 박탈된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저항적 목소리가 잘 드러난다. ④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 구화교의 국적은 대부분 대만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만 내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이중적 차별을 당했다. 500여 명의 화교 당사자는 거리 “시위”를 통해 이에 항의하였고, 우매령의 수필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전부터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 디아스포라의 저항은 집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분된다. 왜냐하면 다문화 당사자 스스로 한국 사회 내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인식과 제도를 비판하고, 이러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권리언어를 발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²⁶⁾

당사자 관점에 대한 ‘이해 결여’는 자연스럽게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진다.²⁷⁾ 혐오는 단순한 정서 표현이 아니다. 혐오는 개개인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회적 커뮤니티에서 배제하고 추방하는 집단적 폭력이자 정치/언어적 무기이다.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이러한 혐오의 언어에 저항하고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5) 3.2절의 손덕준 구술 자료에서도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26) 신용철은 우매령의 수필집 서평에서, 이 글의 의미는 “화교 사회에 대한 호소”이자 “시대와 역사를 알리는 공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배달의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한국의 민족적 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한다” (220)고 적고 있다.

27) 재한 화교 사이에서는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화교에게 ‘까오리짱즈’라 하며 없이 여기는 풍조가 만연” (198)해 있었고, “거꾸로 본인의 자식이 화교 출신 어머니에게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하는 노파심” (199)이 들었다고 한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의의와 과제

코로나19(covid-19)로 촉발된 팬데믹 사태는 국경을 타고 넘으며 전파되고 있다. 이 엄청난 재앙은 인류의 삶이 민족국가의 경계로 구획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지구적인 감염병으로 국경 통제와 방역 기준이 강화되어 여행, 유학, 결혼, 노동 등을 비롯한 국제이주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국제이주의 양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 구성원의 통합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다문화 당사자의 삶은 언제나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항상 지식인이나 활동가, 혹은 예술가에 의해 ‘재현되어야만 하는 객체’로 대상화되어 온 것이다. 이 논고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바탕하여, 그동안 국제이주와 다문화(교육)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당사자 관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재한 화교의 인터뷰와 수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먼저,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필요성과 핵심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소수자의 입장과 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참여’와 ‘저항’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 관점의 핵심 가치는 ‘자기 대표성’과 ‘자기 결정권’이며, 이는 지식인, 활동가, 관료 중심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는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교류’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당사자 관점에 입각한 다문화 연구의 방향을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재한 화교 손

덕준의 구술 인터뷰와 우매령의 수필을 구체적 사례로 삼았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현장 연구 방법을 다문화 당사자 연구에 활용할 때는 피조사자를 대상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당사자의 목소리가 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화교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이 박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넷째, 다문화 당사자의 박탈된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회복하고 복원하기 위한 저항적인 목소리가 존재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문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당사자의 자기 대표성과 결정권을 반영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은 다문화 현장의 사례 관리, 교육과 지원, 그리고 연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이다. 당사자의 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다문화 당사자들의 생활,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등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연구가 다문화 당사자의 권리언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손덕준 구술, 송승석 채록(2012). 인주골 중국동네 사람들, 한국학술정보.

우매령(2016). 아버지와 탕후루, 범우.

2. 논저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2013).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강진구 외(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

- <다문화콘텐츠연구> 35-1호,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5~69쪽.
- 장진구·이기성(2018). 한국문학의 다문화담론에 대한 메타분석, <우리문학연구> 59호, 우리문학회, 7~28쪽.
- 권오경(2010).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민요의 역할과 방향, <한국민요학> 30호, 한국민요학회, 41~73쪽.
- 김대성(2003). 장애인 당사자주의 운동의 참여와 연대정신, <진보평론> 18호, 진보평론, 170~187쪽.
- 김도현(2012).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비판적 이해를 위하여, 진보평론 52호, <진보평론>, 172~190쪽.
- 김도현(2016).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메이데이.
- 김도현(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봄.
- 김영순 외(2014). 다문화교육연구의 경향과 쟁점, 한국학술정보.
- 김은재·최현미(2016). 이주민 당사자들이 인식한 선주민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인식 경험, <한국 사회복지행정학> 18-4호, 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 143~167쪽.
- 김재훈·김민선(2021).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1~24쪽.
- 데이비드 바트럼 외, 이명민·이현옥 외 옮김(2017). 개념으로 읽는 국제이주와 다문화 사회, 푸른길.
- 류지현·김현주(2021). 한국의 다문화연구 경향 고찰, <인문과학연구> 42호,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9~54쪽.
- 무카이야치 노리아키, 이진의 옮김(2016). 베텔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 EM커뮤니티.
- 박윤경·박선운(2021). 다문화교육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4-1호, 한국교육인류학회, 39~63쪽.
- 배상준(2015). 한국의 다문화 영화-장르적 접근, <인문콘텐츠> 36호, 인문콘텐츠학회, 75~108쪽.

- 성태제(2002).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스티븐 모튼, 이윤경 옮김(2005). 스피박 넘기, 엘피.
-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옮김(2004),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왕문영 외 구술, 은정태 외 면담·편집(2007), 한국 화교의 생활과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 유동철(2003). 장애운동의 깃발: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시민과 세계> 4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73~293쪽.
- 유쾌한 고생연구소(2021).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당사자 연구, 신정.
- 이선희·김은재(2012). 다문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참여경험 분석-결혼이주여성 당사자 관점에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0-4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319~348쪽.
- 이용재(2019). 다문화연구의 현황과 과제-정부주도 다문화 담론의 한계와 극복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74호, (사)한국민족연구회, 4~29쪽.
- 조대훈(2014). 다문화교육 연구자의 연구윤리-질적연구의 윤리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3-2호, 한국 사회과교육연구학회, 35~50쪽.
- 최기탁(2016). 다문화 사회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651~672쪽.
- 케런 테일러 외, 제철웅 외 옮김(2018).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가 양성 학습매뉴얼, 울곡출판사.
- 토비아스 휘비네트 외, 뿌리의 집 옮김(2012).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뿌리의 집.

필자 소개

성 명 : 박형준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주 소 :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길 65
전화번호 : 010-2004-4426
전자우편 : corea@bufs.ac.kr

투고일: 2021. 10. 20 / 심사일: 2021. 11. 19 / 심사완료일: 2021. 11. 26